

비정규직철폐 울산대책위 출범

✎ 편집국 | ⓒ 승인 2010.09.03 10:15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는 9월1일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책위의 출범을 알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울산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대책위는 울산지역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울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라고 밝히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 추동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출범을 기해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했다.

하나,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파견노동자 불법사용 행위를 사죄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하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당울산시당,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대총학생회,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울산해고자협의회, 진보신당울산시당,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네티즌연대-참관, 이상 가나다순, 계속 확대중)

대책위 주요활동계획(안)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참가단체별 성명 발표
- 대책위 참가단체 명의 거리현수막 게시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대시민캠페인 진행
- 현대자동차 출입문 출근 1인 시위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울산지역 각계 1000인 선언
- 참가단체별 주요일간지 의견광고
-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시의회 및 구의회 결의안 채택
- 노동부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조사 촉구
- 불법파견 정규직화 조기해결을 위한 노동부, 검찰, 지방자치단체 면담 추진
- 울산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질의서 발송 및 결과 발표
- 국정감사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 정몽구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압박
-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울산시민 서명운동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울산시민 결의대회
- 대대적인 가정용 현수막 달기 운동
-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촛불문화제
- 서울고등법원 조기판결 촉구 울산시민사회단체 탄원서 제출
- 현대자동차 사측에 교섭 및 조기해결 촉구 사회시민단체 서한, 항의팩스 발송
- 불법파견신고센터 설치 및 울산지역 불법파견 노동자 실태조사
- 참가단체별 회원 대상 간담회와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노조가입운동
- 불법파견 판정 확장을 위한 불법파견 토론회 개최

대책위의 출범에 대해 지역 언론은 사회여론을 모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당면하여 불파 문제 해결의 담당자인 현대자동차 사측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기사제공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편집국 nagiju53@hanmail.net